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G20 정상회의가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중심으로 국격(國格) 논의가 새삼스럽게 일고 있다. 한국이 개최국으로서 그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 것이야말로 국제적으로 신장된 국가적 역량을 인정받은 것인니 만치, 그에 걸맞게 국력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대통령과 그 주변 경제관료들이 G20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느낌이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국력을 논의하게 되었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 열렸던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국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마련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09년의 10억 달러에서 2015년 30억 달러로 늘리고, 2013년까지 해외봉사단 2만 명을 파견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IMF와 세계은행 등에 우리나라의 출자분을 확대하고, 이를 기구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수를 늘리며, 세계 각국과의 인재교류를 위한 '글로벌 코리안 스칼라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한해 동안에만 3천5백명(5백2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겠다는 것이다.

국내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간판 5백55만 여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여 불법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G20 글로벌 시민' 되기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공익광고 제작을 늘린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누가 국력을 떨어뜨리는가

지난 12월에 있었던 광화문 광장의 '스노主权' 행사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행안부의 간판정비계획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민족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반면, 논란이 많았던 서울시의 '스노主权' 행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격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가 보기로 각 정부부처가 마련했다는 일련의 방안들은 국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는 어쩐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어설프기 짙어 없다. 제시된 방안들이란 거의 모두가 단기적인 '전시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일회성의 산발적인 전시와 홍보로 어떻게 막중한 국력을 높일 수가 있단 말인가. 전시효과 위주의 정책과

돈 주고 광고 내는 홍보는 저 옛날 개발경제시대에 자주 보던 행태에 다름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G20회의를 준비하는 면면들을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시 개발경제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으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국가브랜드 운운하는데서 보듯이 정부는 국격과 브랜드, 국가와 회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회사는 엄연히 다르고, 또 달라야 마땅하다. 국가운영과 회사운영은 천양의 차이가 있다. 회사는 최종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만, 국가는 공동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브랜드

성되고 축적된 국가의 진면목과 이미지로서의 국격은 쉽게 무너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백번 김구 선생이 일찍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富)하고 강(強)한 나라보다는 인의(仁義)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문화 도덕국가가 자신이 원하는 나라라는 가르침은 깊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 군청공무원의 16%가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융산참사를 1년씩이나 방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면 정부가 감히 국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기당찮다.

지도층의 품격 또한 국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산안 하나, 끝은 노사문제 하나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두고는 이 나라 정치권은 국격을 말할 자격이 없다.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만세삼창을 불렀다는 보도를 보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것은 G20 한국개회가 대단한 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보여준 그 전박하고 가벼운 처신 때문이었다. 누구는 G2라는 표현조차 사용하는데, G20에 흥분하여 표정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그 언행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국력을 높이기보다 떨어뜨리거나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국력을 말하는 자 먼저 내 처신이 국력에 어떻게 영향할 것인지 스스로 신독(慎獨)할 일이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이춘석



최근 4대강 살리기라는 MB정권의 삼질에 영산강은 지역 국회의들이나 지역에 어느 쪽도 손대기 어려운 '양날의 칼'이 된 듯 모양새다. 필자는 영산강이 인접한 마을에서 태어나 유년시절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15년여 동안 영산강을 보면서 꿈을 키워 왔다. 영산강이 삶의 일부분이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던 영산강에 공단이 들어서고, 산업용 폐수와 축산 폐수가 흘러들면서 강은 죽음의 강으로 변해 갔다. 급기야

주는 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시화호의 교통에서도 보았듯 우선 썩어가는 강물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구둑을 개방해 바닷물이 흘러들어오게 하고 자연스럽게 갈별과 습지가 조성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미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은 인급이 있었지만 물류 수단으로서의 영산강 활용은 영산강을 두 번 죽이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산강을 제대로 살리는

4대강 사업, 영산강은 들러리 인가?

하구둑을 막으면서 아예 숨통이 막혀 버렸던 것.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며 자연 정화작용을 했던 기능은 하구둑이 건설되며 상신했다. 지금은 각종 오폐수가 흐르는 3급수도 되지 않는 하천으로 변해 버렸다. 이러한 원인 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를 건설하는 삼질이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지금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산강 사업은 요즘 4대강 사업예산과 맞물려 획일적이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삼질로 상징되는 다른 3대강 사업과는 달리이다. 모두에 언급 했듯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체는 정치적 판단을 떠나 지역민들의 이익과 영산강을 제대로 살려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으로 영산강의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오염원을 차단하고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각종 산업용 폐수와 축산 폐수, 농업용 폐수의 유입도 차단해 깨끗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도록

길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영동한 소견일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영산강은 4대강 사업과 예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영산강을 본연의 모습으로 살리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역적 특수성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서 영산강을 제외하고 '영산강 살리기 특별법'을 제정해 영산강 살리기에 맞는 예산 수립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체가 나서야 한다.

다른 3대강 사업과 맞물려 환경영향 평가 및 문화재조사 등,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의 들러리가 아닌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영산강은 살려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MB 정권의 4대강 삼질에 반대하는 사업을 시간에 허기고 양날의 칼을 뒤집어하기보다 민생의 파탄을 생각해 준엄하게 따져 봐야 한다.

다소 더디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것을 순차대로 풀어야 무리가 없다. 필자는 내년 호랑이 향에 맞아 백두산호랑이가 전 세계를 향해 포효하는 뜻으로 '맹호복초(猛虎伏草)'라는 사자성어를 추천하고 싶다.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은 더디더라도 계획과 기술적인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는 게 좋을 듯 싶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NGO성장센터장〉

10대 성매매 문제, 어른들부터 각성해야

기고



전완준

정부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은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 새로운 국토를 재창조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방식을 지켜보면서 문득 '상탁불하정(上濁下不淨)'이라는 옛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상탁불하정'은 '윗물이 맑아 흘러들어온 물이 물을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샛강이 살아야 영산강이 산다

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이다. 이는 아랫물을 아무리 깨끗이 힘들 위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내려오면 소용없음을 의미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산강 상류지역인 화순군의 화순천과 지석천의 상탁(上濁)을 막는 사업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영산강 살리기 사업 중 화순군 해당사업은 홍수예방사업으로 대규모 홍수조절지 조성과 기존 저수지 둑을 높이는 사업만이 반영된 상태다.

단순히 영산강의 홍수예방을 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전조답이 홍수조절지 사업부지로 활용되는 것에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홍수예방 외에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상류지역에 자연지형을 이용한 소규모의 홍수조절지를 여려곳에 만드는 추세다. 그러므로 화순군 해당사업도 영산강 상류 쟁강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을 줄이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마을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정비, 쟁강 생태하천 조성에 사업비를 우선 배정해야 영산강도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은 더디더라도 계획과 기술적인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는 게 좋을 듯 싶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강석훈·광주 남구 주월1동

백년대계 차원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국민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화순군은 350만 사·도민의식 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이 자리잡고 있다. 올해 화순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주암댐 상류인 내남천 개선사업은 지난 2007년 홍수피해 이후 하천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교수신문이 올해 한국사회의 모습을 비유한 사자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徑)'을 선정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봤다. 방기곡경은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추진, 미디어법 등 긁적한 정부 정책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쟁기로 돌아갔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한다.

다소 더디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것을 순차대로 풀어야 무리가 없다. 필자는 내년 호랑이 향에 맞아 백두산호랑이가 전 세계를 향해 포효하는 뜻으로 '맹호복초(猛虎伏草)'라는 사자성어를 추천하고 싶다.

〈화순군수〉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해 넘기는 지역현안 해결에 역량 모으자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8일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 한 해 추진했던 역점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청사진을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를 대로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올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 발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세계적 수준의 노인종합복지시설이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을 열었고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시행한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남도 역시 대규모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착착히 추진하면서 성장기반을 다졌다. 지원법 제정과 경기장 건설비용 확보로 내년 10월 F1 대회 개최가 가능하게 됐으며 경제불황에도 410개 기업을 유치해 1만2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

한 것은 기업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함께 지역경제의 죽인 삼성광주전자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는 크다.

삼성전자는 1천400억원 규모의 정밀금형개발센터를 첨단산업단지에 건립하는 내용의 MOU를 28일 광주시와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정밀금형개발센터를 첨단산업단지 광주3공장 부지 내에 건립해 오는 201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TV와 프린터 등에 적용될 대형 금형을 개발, 생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투자는 200여명의 고용창출과 협력사 기술 및 생산성 향상 등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업첨단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세계 최일류기업이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기업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온전히 광주시와 지역민의 뜻이다. 광주시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 삼성전자의 투자를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 금형산업의 활성화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민들도 노사 상생문화 정착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밝았고 나서야 할은 물론이다.

無等鼓

최근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을 뒤덮은 단연 '원전'(原電)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날아가 총 400억달러(한화 47조 원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를 확정하면서 관련업체는 축제 무드에 젖었다.

세계 원전의 강호인 프랑스와 이번 불꽃튀기는 수주전 끝에 승리한 한전 컨소시엄은 이번 계약으로 1천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설계·건설하게 된다. 첫 호기는 오는 2017년 준공하고 나머지 3기는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UAE 원전 수주에 따라 벌어들여온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것이다. 일단 발전소 시공 등 건설 부분의 수주액만 200억 달러, 중형 승용차 100만대 또는 초대형 유조선(30만t급) 180척을 수출하는 금액과 맞먹는다. 여기에 원전이 가동되는 60년 동안의 운전, 기기교체 등의 운영에 참여해 추가로 2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빛어진 막연한 불안감이 그것이다. 원전의 양면성을 떠올릴 때는 '같은 물이라도 소가 사면 젖이 되고 뱀이 사면 독이 된다'는 구절을 뒤새겨볼 만하다. 즉, 인류가 원자력을 평화와 공영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광주 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1952년 4월 20일			